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연구책임자 | 김 영 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연구책임자 | 김 영 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 김영춘 연구책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05)

ISBN 89-8479-329-9 93340 : ₩5,000

340.913-KDC4

320.952-DDC21

CIP2005002796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일본의 보수우경화 배경과 전개	7
1. 천황제와 국가사상	9
2. 전후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의 개혁과 전환	12
3. 나카소네와 신보수주의	17
4. 냉전종식과 정치대국화	23
III. 고이즈미 정권하의 보수우경화	29
1. 역사교과서 왜곡	31
2.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국기·국가법제정	34
3. 북·중으로부터의 위협인식 부각	39
4. 헌법개정	44

IV. 일본의 군사안보전략	51
1. 신방위 대강의 수립	54
2. 미·일동맹 강화	62
3. 주변사태법	69
4. 남방방위	75
5. 군사력 강화	77
V. 결론 :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87
참고문헌	94
최근 발간자료 안내	97

표 목 차

<표 IV-1> 일본 주변 유사시 미·일협력 주요 항목	68
<표 IV-2> 신방위대강 : 자위대의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80
<표 IV-3>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 주요 장비의 정비 규모	86

I

서론

일본의 정치문화적 특성은 萬世一系の 전통적인 천황제 일본 사회의 집단주의적 경향으로 파악되며, 아직도 이러한 일본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일본점령정책은 비군사화, 민주화의 개혁을 통하여 일본을 약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 한국 전쟁의 발발 등 미·소 냉전구도의 심화로 인하여,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국가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환 정책인 개혁으로부터 정치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보수국가로 탈바꿈시켰다. 논란이 되었던 전전의 천황제주권론은 전후일본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소위 ‘천황제 민주주의’라는 잡종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

오늘의 보수우경화가 일본사회 내에서 주요사조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1982년 11월 성립된 나카소네(中曾根) 정권 이후였다. 나카소네는 ‘전후정치 총결산’이라는 구호아래 국내적으로는 자민당 장기집권의 위기를 타개하려 시도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전후 패배의식을 탈피하고 세계 제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국제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치대국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나카소네는 일본의 사상을 근간으로 한 ‘대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국민적 결집을 위해 천황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그가 열의를 보인 것은 역대 수상들이 견지한 ‘방위비의 GNP 1%이내’라는 방위비의 억제선을 무너뜨리고 GNP의 1% 한도를 초과하는 등 방위력 증강정책에 힘을 쏟았다는 점이다.

냉전종식 이후 199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보수우경화 추세는 국제 및 국내정치 변동, 경제의 침체 및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일본인의 불안심리와 맞물리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걸프전에서 130억 달러의 전비를 지출하고도 미국 측으로부터 ‘피를 흘리지 않는 국제공헌’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국내적으로는 자민당 55년 체제의 붕괴에 따른 1993년 비자민 8개 정파의 호소가와(細川) 정권 그리고 1995년 무라야마(村山) 사회당 총리의 자민·사회당의 연립정권이 1년여를 버티지 못하고 해체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을 노출시켰다.

이러한 보수우경화 경향의 배경에는 후지오카(藤岡)교수 등 1994년에 주장한 자유주의 사관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인이 잊어온 국가의식과 역사적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1990년대 일본의 안보논쟁을 촉발시킨 주역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로서, 그는 냉전종식을 계기로 일본이 소극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탈피하여 경제력에 걸맞는 안보역할 즉, PKO 등의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보통국가론’을 주장하였다.

2001년 4월 26일에 구성된 고이즈미 내각은 미·일동맹의 강화 및 정치대국화 슬로건 아래서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003년 6월 29일 발표하였다.

일본의 우경화를 살펴 볼 경우, 일반적으로 4가지 요소와 연관시켜 논의하는데, 첫째, 과거사(특히 침략사)에 대한 역사인식, 둘째, 평화헌법의 개정 인식, 셋째, 일본국가 및 민족주의에 대한 편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안보면에서 대국화 입장이다.

본고는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추세를 살

펴보고 아울러 우경화를 촉진시키는 배경과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후, 이러한 우경화 추세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사안보정책의 실태와 변화를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신안보정책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한다.

II

일본의 보수우경화 배경과 전개

탈냉전 이후 일본의 보수우경화를 논하기에 앞서 전전의 일본 천황제, 전후 미국의 점령기의 개혁정책과 1980년대의 나카소네의 전후 총결산으로 표출되는 신보수주의의 움직임 그리고 냉전 종식과 정치대국화-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천황제와 국가사상

일본의 지리적·문화적 상황을 역사적 발전과 관련시켜 볼 때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징을 갖는다. 일본의 해양적 고립성이 다른 측면에서는 외래문물의 복합적 수용을 가능케 하였으며, 일본문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화적 복합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문화변동의 지속성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활발하게 외래문화를 수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존문화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한 채 그것과 융화되는 경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10세기에 기원을 둔 한 귀족의 가계는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으며 천황가는 정치적 권력을 뺏긴 채 10여 세기 동안 존속해 왔다.

고대 중세의 일본정치 전통의 특질을 규명한 丸山教授는 두가지 특징으로 정통성 수준과 정책결정 수준의 명확한 구별과 公治를 들고 있다. 천황이 정통성의 원천이긴 했으나 천황은 권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그 밑의 신하에게 위임하는 전통을 이룩하였다. 그것을 권력의 下降化라고 지적하였다.¹

徳川幕府 체제에 이르면서 일본은 동양에서 유일한 봉건체제를

¹ 현대일본연구회 편, 일본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7), p. 57.

확립시킨 체제 속에서도 권력의 하강화, 다시 말해서 정통성과 정책결정구조의 분리는 철저하게 고수되었다. 특히 幕府體制 하에서 천황을 대신한 將軍이 권력행사자로 그리고 將軍을 대신해서 소수의 영주들이 將軍家の 행정실권을 장악하여 막부정권을 유지하였다.

그 후, 명치유신에 의해 근대국가로서 천황제 국가가 형성되었지만 권력의 하강화현상은 그대로 지켜졌고 명치정부내의 정책결정구조도 公治주의의 전통으로 소수元老의 독점물이 되었다.

일본문화의 보수주의적 성격은 일본인의 일종의 전근대적 민족주의라 할 강한 자기민족 중심성을 형성하는데 작용하였다. 옛부터 천황 중심의 神國사상의 바탕에는 華夷사상을 변용 적용하여 스스로를 華라 하였으며 민족적 단일성에 대한 민감성 외국문화가 아닌 외국인에 대한 강한 혐오, 차별이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² 근대화와 서양화를 一致化 하다시피 한 일본인의 생활의 場에서는 그들 문화의 스승인 서양인에게조차 강하게 차별하는 것 같은 기이한 현상이 일본인 사회 자체의 내부에서조차 집단과 집단간의 차별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근대 일본의 천황제국가는 하나의 종교공동체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조국이며, 군주는 신의 후예인 천황이며, 천황은 종교적·정신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며, 또한 천황은 국민에게 종교적 충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³

² 현대일본연구회, 國權論과 民權論 (서울: 한길사, 1981), pp. 37~38.

³ Ernst Troeltsch, 主谷一彦 譯, トレルチ著作集四, キリスト教と社會思想 (東京: ヨルタソ社, 1981), p. 203.

石田교수는 “명치천황 국가체제의 정신구조를 가족국가관”으로 규정짓고 있으며 그것이 가족주의와 有機體論이라는 두 가지 계기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면서도 결합되어 상호수정 속에서 가족국가관이라는 형식으로 밀착되었다. 明治寡頭 지배층이 중앙집권적 근대국가의 확립을 위한 정신적 기반을 萬世一系の 황실에 대한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며 전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有機體論 分子인 개인의 종속을 강조한 것이며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일방적 복종을 골자로 한 有機體論的 國家를 형성하였다.⁴

명치천황제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천황은 일본인들에게 심정적 구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독특성은 萬世一系の 천황이라는 점과 결합하여 일본중심주의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본인이 식민지통치와 침략전쟁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천황제와 관련되어 있다. 천황제 자체의 존속이 일본국민에게 끼친 영향이다. 분명히 전후에 있어서는 전전의 국가神道가 부정되고,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뀌었으며, 천황은 인간선언을 하여 신(神)으로부터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상징천황제라는 형태이기는 하나, 천황제가 존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인으로 하여금 전쟁책임을 느끼기 힘들게 하였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론은 지도국으로서 일본이 독립국으로서 만주국과 중국을 지도하고, 독립보호국으로 버마, 필리핀을 일본이 종주국으로서 보호한다는 관계가 구성되었다. 공영권 내에서는 독립국간에 직접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지도국에 의한 매개를 통해서 다변적 개별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허용된다. 이것은 각국

⁴ 石田 雄, 明治政治思想研究 (東京: 未來社, 1954), pp. 4~7.

간의 직접적 관계가 일본의 매개 없이 진행되면 일본의 지도적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독립국으로 존재하지만 절대주권의 원리는 부정되었다. 서구적 개념으로서의 독립은 여러 민족의 원심적 분열을 가져오는 것으로, 대동아공영권 내에서는 일본의 지도에 의한 구심적 통합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주장한다.⁵

대동아공영권 구상에는 일본의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과잉상태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

대표적 우파지식인인 中村에 의하면, 러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전쟁이 아시아를 서양의 식민통치로부터 구해냈다는 주장이다. 일본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아시아는 영원히 서양인들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⁷

위에서 살펴 본 대동아공영권과 일본의 침략전쟁의 현상 미화 논리속에는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2. 전후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의 개혁과 전환

미국의 실질적 대일점령정책은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

⁵ 山室信一, “日本外交とアジア主義の交錯” 日本政治學會年報 (1998), pp. 3~32. 東條英機수상의 외교개념과 상통한다.

⁶ 安部博純, 『日本ファッズム論』 (東京: 影書房, 1996), pp. 335~344.

⁷ 中村祭, “日本の使命としての大東亞戰爭,” 勝田吉太郎編, 日本は侵略國家ではない (東京: 善本社, 1993), p. 195.

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일점령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총사령부가 동경에 설치된 것은 9월 17일이었다. 총사령부의 정식명칭은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로 불리웠다.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이 총사령부가 정책결정을 하여 지령(Directive)으로서 일본정부에 전달하면, 당시 대일군사점령의 실력부대였던 미 제 8군의 군정국(Military Government Section)이 그 지령의 집행여부를 감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⁸

미국의 대일본점령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일본이 다시는 미국의 위협이 된다거나 또는 세계의 안전과 평화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 둘째,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며, 국제연합의 이상과 원칙이 제시된 미국의 목적을 지지하는 평화적이고도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일본에서 실시하려던 애초의 전략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두 단어로 요약된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CAP는 육군과 해군을 즉각 해산했다. 일본의 무장 세력은 1945년 11월 30일에 공식 해체되었다.

또 다른 비군사화 조치는 군부 밖에서 전쟁체제를 지탱하던 집단을 겨냥한 것이었다. 1945년 10월에 미군정은 서양의 비판자들이 ‘사상경찰’이라 부르던 억압적인 특별고등경찰을 해체했다. 1945년과 1948년 사이에 점령군은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와 재계의 인물 20만 명 이상을 공직에서 추방했다. 또 국가 신도를 폐지했다.

가장 가혹한 보복은 도쿄재판⁹으로도 불리던 극동국제군사재판

⁸ 信夫清三郎, 戦後日本政治史 I (東京: 勁草書房, 1974), pp. 158, 162~163.

이었다. 재판은 1946년 5월에서 1948년 1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전시 일본의 통치자들을 재판정에 세웠다. 도조히데키(東條英機) 등 28명이 통상적인 전쟁범죄와 새로 추가된 전쟁모의에 관여한 죄로 기소되었다.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도조를 비롯한 7명은 처형되었고, 16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국 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은 1945년 10월에 첫 번째 개혁조치를 발표하면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와 노동조합·농민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여성의 시민권과 참정권을 확대하라고 일본정부에 지시했다. 얼마 후인 12월에는 소작농이 자신의 경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개혁을 단행하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가 새로운 일본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의 절정은 헌법개정이었다. 헌법개정 초안은 1946년 초 점령군 민정국(民政局)에서 작성되었다. 이 개정안은 그 해 봄에 제국의회(신헌법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존속했다)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었다. 신헌법은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1947년 5월에 시행되었다. 전후의 헌법은 천황의 지위를 절대군주에서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격하시켰다. 또한 일본국민에게 미국의 권리장전에 나오는 시

⁹ 도쿄재판에서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이 작성한 기소장의 초안에는 ‘人道에 대한 죄’라는 항목 중에 ‘조선’이 들어 있었다. 만일 한국의 식민지통치에 있어서의 ‘인도에 관한 죄’가 다루어졌더라면, 일본인의 역사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의 기소장의 작성 과정에서 ‘조선’은 탈락하게 된다. 그 이유로서 아와야 겐타로(栗屋憲太郎)는 한국의 대표가 도쿄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점, 또한 재판에 참가한 11개국 중에 식민지를 보유한 국가가 있었고,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도쿄재판의 소추로부터 제외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栗屋憲太郎, “東京裁判にみる戦前後處理,” 栗屋憲太郎編, 『戦争責任・戦後責任』(東京:朝日新聞社, 1994), p. 87. 도쿄재판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의 자유 -언론·집회·종교의 자유- 를 포함하는 ‘기본인권’을 보장했다.

1945년에서 1947년까지 점령군 관리들은 또 다른 변화를 강요했다. SCAP는 1945년 10월 4일부터 공산당원을 석방했다. 또한 일본의 검열제도를 금지하고, 당시 미국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더 폭넓은 정치적 표현을 인정했다. 역설적인 것은 SCAP가 군국주의 또는 전시체제를 계속 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해방된’ 일본의 문화계를 검열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사실이다.¹⁰

점령군 개혁가들은 문어발식 기업왕국인 재벌을 공격했다. 그들은 미쓰이·스미토모·야스다·이와사키 등의 재벌가가 지배하던 지주회사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박탈했다. 또 각 재벌조직 내의 일부 대기업을 해체했다. 점령군은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하였다. 농지개혁은 기본적으로 지주가 소유한 토지를 수용해 소작인에게 분배한 것으로 가족 중심의 소농 이주를 이루는 농촌을 만들어냈다.

학교 역시 개혁의 대상이었다. SCAP는 전쟁과 충성 대신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라고 문부성에 제시했다.

장기적인 영향력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맥아더의 개인적 견해가 천황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1945년 가을에 맥아더는 천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로 부상했다. 그는 히로히토(裕人)를 강제로 전범재판에 회부하거나 퇴위시키면 사회질서와 미국의 정책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긴급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 그의 로비로 인해 전후일본의 정

¹⁰ Andrew Gordon, 김우영 역, *현대일본의 역사: 도쿠가와시대에서 2001년까지* (서울: 이산, 2005), p. 417.

치체제는 이른바 ‘천황제 민주주의’라는 잡종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¹¹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방향은 당시 미 국무성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케난(G.F. Kennan)의 의견서에 더욱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①일본은 필리핀과 함께 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국의 안전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국가라는 것, 따라서 ②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우호국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부흥을 촉진하여 일본이 극동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점령정책은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에서 경제부흥으로 이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③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되, 그것은 간단하고 일반적인 것이어야 하며 차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④오끼나와는 장기간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¹²

1947년부터 그런 태도들이 미국과 일본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런 새 출발은 점령정책의 전환,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로 알려지게 되었다.¹³ 1948년에 미국은 과거에 재벌기업군에 속했던 자회사들의 해체계획을 축소했고, 1949년에는 전쟁보상에 관한 모든 요구를 철회했다. 1948년에 SCAP는 새로운 전후 노동법을 개정하여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근로기준의 보호를 완화하도록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또 일찍이 1947년 초부터 경찰청 창설을 일본에 촉구했고, 그 후 일정한 한계 내에

¹¹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W.W. Norton, 1999), pp. 145~156.

¹² 현대일본연구회 편, *日本政治論* (서울: 박영사, 1981), p. 85.

¹³ Andrew Gordon, 김우영 역, *현대일본의 역사: 도쿠가와시대에서 2001년까지*, p. 417.

서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했다.

이러한 새로운 점령정책의 전환은 그 후 1949년 10월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더욱 공고하게 된다.

전후 일본의 변혁을 전전체제와 연관시켜서 검토하여 보면, 그것은 1946년의 헌법개정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천황제주권론에서 국민주권론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점령정책이라는 외압적인 계기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의 심정적인 면에서 역사적 전통의 천황제에 대한 경외심은 살아 남아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1948년 이후, 미국의 대일경제부흥정책으로 인하여 일본은 자본주의 성장 속에서 보수정권이 구축됨으로써, 전후민주주의는 미·일안보보장체제하에서 보수화의 방향으로 기울어 갔다.

3. 나카소네와 신보수주의

일본은 1980년대 들어와 급격히 보수화되어 갔으며 보수화 형태는 천황을 정점으로 내셔널리즘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일본인의 원형을 찾는 방향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나카소네정권이 戰後 總決算을 내걸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참배하고 천황을 미화하는 신교과서가 채택되어 각 학교에서 히노마루(日の丸), 키미가요(君が代)가 강요되었으며 천황과 자위대의 접촉이 빈번해졌다. 특히 1989년 히로히토(裕人)천황이 죽고 1990년 아키히토(明人)천황이 즉위하면서 천황가의 종교적 의식이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어기면서 국가의 공식행사로 치루어지는 등 천황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있었다.¹⁴

신보수주의에서 드러난 내셔널리즘의 특징은 대국주의의 선언과 상징천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운명공동체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국제국가로써 어울리는 신보수주의 즉, 운명공동체론을 일본국민의 의식 속에 불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움직임은 일본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된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 체르넨코가 73세로 사망하자 후임에 고르바초프가 선출되었다. 소련의 신지도부는 궁지에 빠진 경제재건을 제 1의 목표로 하였고 이것을 위하여 군축교섭에 열의를 나타냈다. 이리하여 1985년 11월 제네바에서 6년 만에 미·소 정상회담이 열렸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양국정상이 평화를 위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긴 냉전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긴장완화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카소네수상은 ‘戰後政治의 總決算’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가의식의 육성에 힘을 쏟고 국가의 권력과 권위 회복을 도모해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군사대국으로 변화시키려 하였다.¹⁵

나카소네수상은 1985년 7월 27일 자민당의 가루이자와 세미나에서 한 강연이 매우 인상적이다. “.....전전에는 황국사관이 있었

¹⁴ Andrew Gordon, 김우영 역, 현대일본의 역사: 도쿠가와시대에서 2001년까지, p. 548.

¹⁵ 浅井基文, 新保守主義 (東京: 柏書房, 1993), pp. 60~62.

다. 전후는 태평양사관, 다시 말해서 동경재판사관이 나왔다. 연합국의 법률로써 일본을 피고로 하여 문명·평화·인도의 이름으로 재판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최종적인 판정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무엇이든지 덮어놓고 일본이 나쁘다는 자학적인 풍조가 퍼진 것이다. 지금도 그것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본의 나쁜점, 전전의 나쁜 것만을 쓰기만 하면 된다는 풍조이다. 나는 반대이다. 전쟁에 이기든 지든 국가는 국가다. 오욕을 버리고 영광을 구하는 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모습이다.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¹⁶ 그는 지금의 그의 史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분히 대동아전쟁 긍정론적 사관을 암시하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또한 이 당시 나카소네수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책임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86년 사회당의 도이(土井)의원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참배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의 생각이 통용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으로,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국민감정도 생각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식 혹은 통념에 의하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것이 중국적으로는 국익을 지키는 방도에도 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일본이 고립되었을 경우에 과연 아시아를 위해서 第一線에서 전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실한 그 장병들이, 英靈들이 기뻐할 것인가? 영령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¹⁷

¹⁶ 李甲允의 9인, 현대 일본의 정치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6), p. 154.

나카소네에게 “일본군은 침략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인들은 그들을 침략자라고 부른다. 당연히 나카소네가 아시아의 역사인식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부터 정치대국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는 ‘영령’을 침략자라고 부르는 아시아의 역사인식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딜레마였다. 그는 이 딜레마를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나타나는 논리로 해결했다. 즉 ‘영령’들의 본래의 목적은 아시아와의 우호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침략자로 불리우는 것에 의하여 아시아와의 우호가 성립된다면 그를 감수할 것이라는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논리를 펴면서 나카소네는 다른 우익정치인보다 진일보한 역사인식을 표명하였다.

나카소네는 역대수상으로는 최초로 전두환 정권시대에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괴이한 논리를 늘어놓으면서 정치대국화를 위한 전전의 침략전쟁을 미화하였다.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1985. 8. 15)와 더불어 나카소네수상이 열의를 보인 것은 ‘방위비의 GNP 1%이내’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 이전부터 방위비에 관한한 군비확대라는 등식 때문에 국민의 강한 불안감을 반영하여 三木, 福田, 大平, 鈴木 등 역대 수상들은 ‘방위비의 GNP 1%이내’라는 방위비의 억제선을 지켜왔다.

1985년 나카소네 내각이 채택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86~90)은 일본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서, 장비나 무기는 군수

¹⁷ 中曾根康弘, 大地有情 (東京: 文藝春秋社, 1996), p. 493.

¹⁸ 김준섭,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2000년 가을), p. 269.

방위용을 넘어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영해뿐만 아니라 해상 방공능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이 계획의 총경비는 18조 4천 억 엔으로 이 기간중 GNP의 1%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나카소네는 경제대국에서 군사대국으로 착실하게 군비증강에 노력하였다. 물론 이 배경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와 일본의 軍産複合體인 독점자본 요구가 반영된 점도 있다.

하세가와(長谷川) 정치경제 평론가의 견해에 의하면, 전후 일본에 있어서 미점령당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평화헌법에 의한 미점령정치 이후 일본에 정착된 ‘1955년 정치체제’는 일본인들에게 富와 平等을 가져다주었고, 동시에 그들에게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아울러 일본에 國家主義와 民族主義를 싹트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 사이에 나라에 대한 자신감,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이 생기면서 그들은 평화헌법과 냉전시대의 산물인 1955년 정치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대결함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대결함은 전후 55년 체제가 일본정치를 지나치게 미국화시킨 경향이 있고, 또한 대중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하여 돈을 잘푸는 선거 즉, 金權정치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언론에 쉽게 좌우되는 언론정치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정치 리더십과 국가주의가 경시되는 탈국가주의 정치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나카소네 등 신보수주의자²⁰들은 자민당의 금권

¹⁹ 長谷川慶太郎, 21世紀の世界をさぐる: マルクス主義を越えて (東京: 學習研究社, 1992), pp. 138~140.

²⁰ 오오다케 히데오(大嶽秀夫)는 신보수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laissez faire liberalism), 대외적 전통주의(nationalism), 사회적 자유주의로 보았으며, 여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대안은 대내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책임있는 보수양당제 도입과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역할의 증대인 것이다.²¹

나카소네는 일본의 사상을 근간으로 한 ‘대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직된 집단성과 위계질서관을 신축적 집단주의로 전환시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발상이다. 나카소네의 신보수주의적 교육이념은 교육에 있어서 뿌리 깊은 획일성, 경직성, 비국제성을 타파하고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존중, 자유와 자율, 자기책임원칙 즉, 개성중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집단적 충성심, 집단적 응집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도 위계질서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또한 나카소네는 “국가에는 최소한 종교에 준하는 상징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헌법상 상징적 존재로 명시되어 있는 천황제에 정치·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²³ 대중민주주의의 국민적 결집을 위해 천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카소네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민주주의를 접목시키는 것이 대중민주주의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

기에 나카소네의 일본의 국제화국가의 의지를 추가시켰다. 大嶽秀夫, “中曾根政治のイデオロギーとその国内政治的背景,” 同人誌レウアイアサツ特輯: 新保守主義の擡頭 (1987年 第1號), pp. 73~91.

²¹ 中曾根康弘, 佐藤誠三郎, 村上泰亮, 西部邁, 冷戰以後 (東京: 文藝春秋社, 1992), pp. 347~348. 이와 관련 최근 가네마루는 우파적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당의 도이(土井) 前당수, 다나베(田邊) 위원장 등과 보수양당체제를 논의하였다고 한다.

²² Wayne Wilcox, Leo Rose, and Gavin Boyd, *Asia and International System* (Cambridge, Mass.: Winthrop, 1972), pp. 50~51.

²³ 中曾根康弘, 佐藤誠三郎 外, 冷戰以後, pp. 54, 337, 348.

기 위한 국민통합과 권위안정 유지를 위하여 천황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⁴

4. 냉전종식과 정치대국화

냉전이후 일본의 외교 전략은 21세기를 향하여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 발돋움 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外交青書』는 일본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조 행동면에서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전제 하면서 일본의 정치대국화 추진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 놓고 있다.²⁵

1990년대 일본의 안보논쟁을 촉발시킨 주역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로서, 그는 냉전종식을 계기로 일본이 소극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안보역할 즉, PKO등의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오자와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무장 경제우선주의 노선은 역할이 종식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오자와의 저서 『일본개조계획』(1993)은 1994년 2월 말까지 64만 부가 팔려 오자와 붐을 형성하였다.²⁶

오자와 붐은 북한의 핵문제, 노동1호 발사실험 그리고 경제난 심화를 계기로 북한의 장래와 한반도 유사에 대한 불안심리와 맞

²⁴ 김정우·김영춘·여인곤·전동진·최춘흠,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와 동북아 질서: 1990년대 동북아질서 예측(Ⅱ)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70.

²⁵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 (1991), pp. 18~20.

²⁶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물려서 이루어졌다. 그는 국제연합군의 자위대 참가가 일본의 현행 헌법, 미·일 안보조약, 유엔헌장의 틀 속에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헌법의 개정보다는 헌법의 해석에 의해 현실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자와류(流)의 현실주의자는 군사적인 국제공헌에도 적극적이다. 물론 자위대를 강화한다고 할지라고 양적인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질적인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육상자위대의 정원도 감원하고 고도의 정보화된 장비의 도입을 통하여 질을 높이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거품경제는 외형적으로 국민총자산을 증식시켰으나, 이는 사회자본이 충실해져 오는 결과라기보다는 지가와 주가의 동반상승과 이에 편승한 투기현상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품경제는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일본경제를 구조적 침체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거품경제의 붕괴는 경기침체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의 후퇴를 야기시키고, 분자화된 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일본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그 긴장과 모순이 우경화로 분출되었다. 이를 빌미삼아 우익세력들은 국가의 위기이며, ‘국민’이 형성되지 못해 일본이 무기력에 빠졌다면서 ‘영광스런 역사’의 재현에 나서고 있다.

자민당 55년 체제의 붕괴는 보수적인 일본인들의 정치적 안정감을 약화시켰다. 1993년 비(非)자민 8개 정파의 호소가와(細川, 일본신당)정권 그리고 1995년 무라야마(村山, 사회당)총리의 자민당·사회당 연립정권은 1년여를 버티지 못하고 해체되었으며, 1996년에는 재건된 자민당을 축으로 한 하시모토 연립정권이 탄생했으나 이미 득표수(소선거구)에 있어서 과반수를 점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본 정치권의 역학구도를 1996년 자민당을 축으로 하는 55년 체제와 비교해 본다면 사회당과 같은 강력한 야당의 부재와 혁신 세력의 와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회당이 몰락한 것은 연립정권에 참여하여 헌법, 자위대, 미·일안보 등과 관련한 기본노선을 전환시킴으로써 이념적으로 퇴색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당이 군소 정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할 강력한 대항세력이 없어지게 되었다.²⁷ 리버럴한 세력인 민주당이나 진보적 지식인 그룹은 강력한 여론의 지지아래 진행되고 있는 총체적 보수화 현상을 저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보수우경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자유주의 史觀이 작용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관²⁸은 도쿄대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 교수 등이 1994년 주창한 개념으로, 이는 일본인이 잊어온 국가의식과 역사적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열린 도쿄 전범재판이 일본인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빼앗아 범죄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학대(虐待)하며’ 노력한 결과, 이제 선진국들을 따라잡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후지오카 교수 등 자유주의 사관에 동조하는 지식인들은 1997년 1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를 결성하고 앞으로 일본이 나아갈 목표 즉, 우경화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새역모’의 사업은 역사교과서 내용의 개정을 관계당국에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민운동 차

²⁷ 일본이 현재도 역사왜곡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일본사회내의 좌파의 몰락 때문이며, 극우파는 역사를 모르는 젊은층을 호도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메거진은 지적하였다. Financial Times Magazine, 2005년 5월 28일.

²⁸ 藤岡信勝, 近現代史 教育の改革-善玉 悪玉史觀を超越して (明治圖書, 1996), p. 1.

원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들은 1996년 7월 ‘중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문교당국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한편, 동시에 역사교과서 비판운동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전개한다는 활동방침을 결정했다.²⁹

또한 한일합병(1910)에 대해서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일본의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기 보다는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역사적 다이내미즘’과 한국의 ‘자기관리능력의 결핍’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였다.

‘새역모’의 개헌주장에는 정계와 재계가 한 목소리로 합창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위하여 정계는 1997년 5월 <헌법조사위원회 설치추진 의원연맹>(1997년 6월 17일 현재 의원 375명 참여)이라는 초당파 의원연맹을 결성했다. 이 연맹의 일차적 목표는 국회 안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연맹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1999년 3월 자민, 민주, 공명, 자유, 개혁클럽은 공동으로 조사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이 6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그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헌법조사회>가 중·참양원에 설치됐다.³⁰

자유주의사관은 한국이나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³¹ 아시아에 중요한 경제

²⁹ 俵義文, ドキュメント‘慰安婦’問題と教科書攻撃 (高文研, 1997), pp. 121~122.

³⁰ 朝日新聞, 1999년 6월 27일.

³¹ 미국의 학계와 언론에서도 일본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있다. David Boulting, op. cit.; Norma Field, “War and Apology: Japan, Asia, the Fiftieth, and After,” *Positions*, Vol. 5, No. 1 (Spring, 1997), pp. 1~49. 특히 *The New York Times*는 1998년 말부터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칼럼과 기사를 실고 있다. “Burying the Past: War Guilt Haunts Japan,” 1998년 11월 30일; “Comparing the Unspeakable to the Unthinkable,” 1999년 3월 7일; “A

적 이익이 달려 있고 또한 대미협조를 중시하고 있는 보수정권으로써 이에 동조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즉, 현실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국익에 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사관은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이데올로기이므로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³²

Tojo Battles History, for Grandpa and for Japan,” 1999년 4월 22일;
“Japanese Halt a Deal on a Book about Nanking,” 1999년 5월 20일.

³² 野輝將, “軍慰安婦’論争とナショナリズム,” 歴史評論, 1998. 4, p. 25.

III

고이즈미 정권하의 보수우경화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199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유주의 사관(史觀)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정계, 언론계가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4월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나카소네 전 총리와 정책 노선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인물이다. 헌법개정, 총리직선, 신사 참배, 집단적 자위권 등은 이미 나카소네 전 총리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노선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의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서며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의 실현을 고이즈미 총리를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고이즈미는 총리가 되면 일제시대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일본의 우경화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와 같이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은 우경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정치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1.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8종의 새 역사 교과서가 4월 3일 검정을 통과함으로써 역사왜곡 논란을 빚었다.³³ 그 중에서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1997년 1월 결성)이 중

³³ 교과서 문제가 쟁점화된 것은 80년대 초로써, 그 계기는 1980년 1월부터 8월 까지 19회에 걸쳐 자민당의 기관지인 자유신보에 실린 연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재물을 집필한 이시이(石井一朝) 전 일교조 편집국장은 당시 교과서의 집필 및 채택에 공산당 및 공산주의가 침투되어 있다고 경고하면서 문부성의 무지 및 허약을 비판했는데, 이것이 자민당의 문교족의원(문교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한 의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호섭·이연우·한상일·이원덕, 일본의 우익연구 (서울: 중심, 2000), p. 127

심이 되어 만든 새 교과서가 황국사관적(皇國史觀的) 민족주의에 기울어 한국 등 관련 국가의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어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또 다른 역사교과서들도 군대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삭제하고,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바꾼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보수우익은 2001년에 이어 2005년에도 또 다시 역사교과서 문제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검정용으로 제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2001년 출간한 현행판의 황국사관적 민족주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더 교묘하게 왜곡했기 때문이다. ‘새역모’가 집필하고 후소사(扶桑社)에서 발행한 공민·역사교과서의 2005년 개정판 검정신청본은 침략 전쟁 등 일본의 과거 잘못을 감추거나 애매하게 서술하는 현행판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역사교과서 개정판은 한국의 고대·중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왜곡된 인식을 기술하였다.³⁴ 한국사가 중국의 지배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서술하고, 연표에서는 고조선을 누락시켰다. 고대 부분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군사적 영향을 미쳤다는 임나일본부설을 한층 강화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받은 피해 사실도 누락시켰다.

특히 ‘식민지 지배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현행판의 기술도 빠졌고, 창씨개명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이 일본식 이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일제 식민정치의 강제성을 희석시켰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강제징용과 황민화 정책에 대한 서술도 교묘하게 약

³⁴ 김영춘,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통일정세분석 2005-07, 통일연구원), p. 3.

화시켰다. 또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란 별도 항목을 마련해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번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05년 공민 교과서에서는 “구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등 북방 영토, 일본해(동해)상의 다케시마(독도), 동지나해상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한국·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와 일본 국가·국기 문제 등 주변국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은 현행판 보다는 덜 노골적이다. 주변국이나 시민단체들과 다투기보다는 우선 채택률을 높이자는 전략 때문으로 보인다. 2001년 ‘새역모’가 제작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0.03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일본 정치인들이 자유주의 사관을 지지하고, 언론이 이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해 극우 이념을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2001. 3. 2)은 사설을 통해 “일본은 사상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한국·중국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과거사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시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고이즈미 내각에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일본판 ‘네오콘’으로 불리는 초강성 인물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³⁵ 네오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

³⁵ 위의 글, p. 8.

사장 대리, 마치무라 노부타가(町村信孝) 외상,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등을 들 수 있다.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자위대는 군대다”, “누가 총리가 되든 야스쿠니를 참배해야 한다”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동시에 왜곡된 교과서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가 외상은 2001년 역사 왜곡 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가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할 때 문부과학상을 지낸 인물이다.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해서 그랬다”는 망언을 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무상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회장을 맡고 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경제 산업상,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환경상은 왜곡 교과서를 지원하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출신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미가요(국가)의 재등장(법제화 1997. 7. 22), 일본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와 개헌논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2.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국가·국가법 제정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패전기념일(종전일·2001년 8월 15일)을 피해 2001년 8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일본 총리가 재임 중에 8·15를 맞아 공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이후 16년 만

의 일이다. 1996년 7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당시 총리가 참배했으나 이는 자신의 생일에 개인자격으로 한 비공개 행사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이라고 서명했으나 신도(神道)의식을 따르지 않고 공식참배인지 사적참배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후쿠타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진(戰陣)에서 사라져간 여러 영령들 앞에서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그들의 희생 위에서 세워졌음을 생각하며 매년 평화에 대한 맹세를 새롭게 해왔다”며 “이 같은 내 신념을 설명하면 우리 국민과 근린제국의 여러분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참배했다고 말했다.³⁶

한국정부는 신정승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로서는 일본 총리가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인근 국가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전쟁범죄자들에 대해서까지 참배한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또 “우리는 고이즈미 총리가 인근 국가들과 진정한 선린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관련 국가의 처지와 국민감정 등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일본 고이즈미 내각의 각료 5명과 중 참의원 85명,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 도지사 등이 패전 기념일인 2001년 8월 15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³⁷

고이즈미(小泉) 일본총리는 2004년 3월 27일 야스쿠니 신사참

³⁶ 동아일보, 2001년 8월 4일.

³⁷ 毎日新聞, 2001년 8월 16일.

배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자기 나라 전몰자를 추도하는데, 왜 외국인이 안 된다고 하는지 아직도 이상하기 그지없다”고 발언하였다.³⁸ 또한 고이즈미는 매년 한 차례씩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³⁹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행위는 정교분리(政教分離)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 법원(후쿠오카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⁴⁰ 이번 판결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참배가 왜 헌법 위반인지 모르겠다”며 향후 계속적인 참배의사를 밝혔다.

일본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이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공적(公的) 행위며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⁴¹

오사카 고법은 이날 대만 출신 등 188명이 일본 정부와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고이즈미의 신사참배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애매한 언동으로 일관해도 공적행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은 2004년 4월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의 판결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날 오사카 고법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에 따라 매년 참배하겠다고 공언한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오사카 고법의 위헌 판결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왜 위헌인

³⁸ 讀賣新聞, 2004년 3월 28일.

³⁹ 朝日新聞, 2004년 3월 28일.

⁴⁰ 毎日新聞, 2004년 4월 8일.

⁴¹ 朝日新聞, 2005년 10월 1일.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배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무로 참배한 것이 아닌데 어쩌서 위헌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집권 후 다섯 번째로 2005년 10월 17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청와대는 연말로 예상되던 한·일 정례회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대응조치다.⁴²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하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9년 메이지(明治) 천황 시절 일본군인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도쿄 쇼콘샤(招魂社)’가 전신이다. 1879년 야스쿠니 신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침략전쟁, 제2차세계대전 등에서 숨진 군인과 군속 246만 6000여명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다. 부지가 3만평이나 되며 ‘일본 육군의 아버지’ 오무라 마사지로(大村益次郎)의 동상, 가미카제 돌격대원의 동상, 유슈칸(遊就館)이라는 일종의 전쟁박물관 등이 함께 있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군국주의 확대정책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며 천황숭배와 군국이념을 조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에 진주한 미국의 맥아더 사령부는 야스쿠니 신사와 국가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영 신사라는 특권적 지위를 박탈했다.

1978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合祀)되면서 총리나 각료의 참배 여

⁴² 중앙일보, 2005년 10월 18일.

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제의 침략을 당한 국가들은 일본 총리가 전범 위패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으나 일본의 보수우익세력과 유족회 등은 총리의 공식참배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공식 참배하자 한국, 중국이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후 총리의 공식 참배는 없었다.

군국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가 완전히 복권되었다. 일본국회는 1999년 7월 22일 중의원에 이어 8월 9일에는 참의원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국기·국가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장기로 불리운 히노마루와 천황의 찬가인 기미가요가 패전 55년 만에 다시 일본의 국기, 국가로서 공식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55년만에 국가로 부활한 기미가요(君が代)는 “천황의 치세가 천년만년 계속되길 기원한다”는 가사로 되어 있어 사실상 천황찬가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의 중의원 통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찬반표의 분포이다. 찬성이 403표, 반대가 86표라는 사실은 일본국민의 대다수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복권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⁴³

그간 일본사회에서는 히노마루의 계양과 기미가요의 제창은 일종의 사회적 금기였다.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의 공식행사에서 그 같은 금기는 불문율로 지켜져 왔다. 거기에는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참회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같은 사회적 관행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

⁴³ 讀賣新聞, 1999년 7월 23일.

기미가요와 히노마루가 1999년 국기·국가로 정해졌지만 문부 과학성은 국기앞 기립·국가제창을 권유하고 있을 뿐이다.⁴⁴

일본정부는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던 히노마루와 천황의 찬가인 기미가요를 부활시켜 교육과정을 통해 확산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일본우경화 확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북중으로부터의 위협인식 부각

일본은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노동1호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안보정책을 강성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1994년에 들어서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경고와 이에 반발한 김일성 정권의 위협적인 자세로 동북아 정세는 긴박해졌다. 따라서 당시 일본정부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는 방위청과 군사적 현실주의자의 입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⁴⁵

더욱이 북한에 의해 강행된 노동1호 미사일 실험과 그에 이은 대포동1호 실험은 일본사회 내에 북한 위협론을 팽배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98년 8월 31일 실시된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북한은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특

⁴⁴ 중앙일보, 2004년 10월 29일.

⁴⁵ 하타 수상이 한반도가 위기상태에 빠졌을 경우 시한입법 중 유사입법을 검토한다고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대미 작전지원, 대미 후방지원, 국내인 긴급수송, 피난민 대책, 原發에 대한 경비 등이 골자였다. 朝日新聞, 1994년 9월 15일.

히 대포동미사일1호 발사실험은 북한의 지하핵 의혹시설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북한에 의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동시 보유가 초래할 가공할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일본은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이 사전에 예고 없이 자국의 상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일본은 대포동 사태를 전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초강경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였다.⁴⁶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이 돌연 체제붕괴로 가거나 군사적 모험주의 노선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DMZ에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이용하여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은 대량난민의 유입이나 주일미군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관여에서 오는 안보적 위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는 2000년 3월 8일 발간된 연례보고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0」에서 북한에 대해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보유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⁴⁷

⁴⁶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이후 취한 일본의 대북한 제재는 식량지원 중단, 수교회담 중단, 전세계 운항 중단 등이다. 일본은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공동으로 「전역미사일방위」(TMD)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개선비용 291억 엔을 2000년 방위예산으로 배정했다. 朝日新聞, 1999년 8월 25일.

⁴⁷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중인 TMD를 중국이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순수한 방어무기기기 때문에 인접국가와의 전략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朝日新聞, 2000년 3월 9일.

동 보고서는 북한의 향후 동향에 대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정치·경제 양면에서 군사위주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시 중지하고 있으나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자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김정일 체제에 자신을 얻을 때까지는 미사일 및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1년도 방위백서』는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긴장완화를 위해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⁸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급속히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표시했다. 방위청은 여당인 자민당과 함께 국방관계합동회의를 열고 중국이 핵·미사일 및 해·공군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군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⁴⁹

『2000년도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정도로 기술했으나 『2001년도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명시했다.⁵⁰

탈냉전시대 들어 중국은 근해 적극방어 및 원양작전 능력 향상

⁴⁸ 朝日新聞, 2001년 5월 23일. 여기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전제로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려는 방위청의 계산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앙일보, 2001년 5월 24일.

⁴⁹ 朝日新聞, 2001년 7월 6일.

⁵⁰ 朝日新聞, 2001년 5월 23일.

을 위해 구축함,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전력강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0년 8,500톤급 러시아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을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였으며, 러시아와 2척의 추가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이면 총 4척을 보유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는데, 이 구축함들은 미국의 이지스함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 외에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원양 해군으로서의 확실한 전력 확보를 위해 항공모함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정책과 관련하여 퇴역한 호주제 Melbourne호(1985년), 소련제 Minsk호(1998년)와 Kive호(2000년), 건설 중이던 소련제 Veryag호(1998년) 등의 해외도입 및 활용 가능성, 스페인이나 프랑스로부터의 신형 항공모함의 해외도입 모색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중국의 자체적인 항공모함 생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⁵¹ 그러나 일부자료는 중국이 2005년경이면 벌써 항공모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SU(수호이)-27, SU-30MKK 등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 주변국에 대한 공격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신형 Y-8 조기경보기도 배치할 예정이다. 비밀리에 자체개발한 최신예 J(젠)-10 전투기 10대를 최근 난징군구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도 했다. 중국군 최고 지휘기관으로 창군 이래 육군이 독점해 온 총참모부에 최초로 해군 및 공군 출신이 부총참모장으로 임명된 것도 해·공군 위상강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다.⁵²

⁵¹ Ian Storey and You Ji, “China’s Aircraft Carrier Ambi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LVII, No. 1 (Winter 2004), pp. 77~93.

⁵² 조선일보, 2004년 8월 28일.

전체 병력의 75%가 넘는 170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 지상군은 신속대응능력 확보에 변화의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지상군 병력의 20~25%가 신속대응 능력을 갖춘 ‘쾌속반응부대(快速反應部隊)’다. 국지전 발생 후 30일 이내에 약 6만~8만 명의 신속대응군을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의 군비증강 목표를 자신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아·태지역에서 독자적인 패권을 추구하고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와 맞물려 방위청이 중국의 군사력강화를 의도적으로 심각히 부각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⁵³

위에서 살펴본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확대 정책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게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방위백서는 1990년 말부터 중국을 위협국가로 꼽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 미국은 이미 2001년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했으며 일본도 『2004년도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였다.⁵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등 안보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빌미로 보통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군사대국을 추구하고 있다.

⁵³ 중앙일보, 2001년 5월 24일.

⁵⁴ 조선일보, 2004년 8월 28일.

4. 헌법개정

1999년 7월 일본 중의원은 헌법조사회의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평화헌법 시행 52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내의 헌법문제를 논의하는 정식기관이 설치되게 되었다. 헌법개정 논의의 초점은 군사력보유와 전쟁의 포기를 명기한 제9조의 개정여부에 모아지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도 2001년 5월 8일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모든 가능한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⁵⁵

따라서 자민·공명당 등은 2001년 5월 16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위한 정책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방위청이 제출한 PKO협력법, 자위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 정비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자민당 헌법개정 요강안⁵⁶의 최대 특징은 ‘국방군’의 설치다. 현행 헌법은 9조에서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자위대는 23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군대가 아니라 행동에 제약이 많다. 이 때문에 보수세력들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2003년 5월 국회에서 “자위대는 군대다.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요강은 또 미국 등 동맹국이 전쟁을 할 경우 일본이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상 직접침략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하는 ‘개별적 자

⁵⁵ 朝日新聞, 2001년 5월 9일.

⁵⁶ 讀賣新聞, 2003년 6월 28일.

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면 일본은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세계 곳곳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 진출도 가능하다. 요강은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요강은 또 “외국이 침략하면 총리가 국회 승인을 얻어 ‘국가긴급사태’를 발동하고 지방자치단체·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 “국민은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일제의 군국주의 헌법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⁵⁷ 그는 또 개헌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냉전종식 후 일본의 분위기는 크게 변했다. 특히 걸프전쟁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찬성여론이 호헌여론을 앞서는 양상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헌안 마련 지시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 선거전략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국민여론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하고 총선에서 자민당이 크게 승리하면 임기 중에는 개헌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개헌논의는 급속히 현실성을 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 언론들도 대체로 개헌론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총리의 결단을 지지한다면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은 언제, 헌법전문은 언제, 개정안 전문은 언제까지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정권공약으로 명시하라고 촉구했다.⁵⁸

⁵⁷ 毎日新聞, 2003년 8월 26일.

⁵⁸ 讀賣新聞, 2003년 8월 27일.

산케이신문도 자민당은 자주헌법 제정을 당헌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리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개헌안 마련지시가 총재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너무 가볍게 다룬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개헌론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도 헌법에 관한 논의는 환영하지만 총리의 과거 발언과 최근의 처신을 보면 헌법개정 논의의 초점은 9조 개정에 맞춰져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이라크전과 같은 전쟁에 자위대가 참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헌이 기껏 미국이라는 보안관의 조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노이케 요시타다(鴻地) 일본 구조개혁 특구·방재 담당상은 일본 헌법은 자위대를 군대라고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⁹ 고노이케 담당상은 효고(兵庫)현 카이바라시(市)에서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적인 해석”이라며 “아무도 것처럼 강력한 군대가 군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으며 헌법에도 그와 같이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이케 담당상은 최고위법에 그와 같은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계에서도 헌법개정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⁶⁰ 2003년 9월 20일에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

⁵⁹ 연합뉴스, 2003년 9월 13일.

마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등 입후보자 4명이 무력행사 및 전쟁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9조의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13일 방송사(NHK)토론회에서 자민당 창당 50주년이 되는 오는 2005년까지 당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야당을 포함한 국민적 논의를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 후보는 “평화원칙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가메이 시즈카 후보는 “지금 상태로는 (헌법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기본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후지오 다카오(藤井) 후보도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위대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2005년 9월 11일 실시된 일본총선(중의원의석: 소선거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296석을 차지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31석과 합치면 중의원 정수 3분의 2를 넘는 327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자민당은 총선 직후 중의원에 헌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10월 6일부터 국민투표법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⁶¹ 개헌을 위한 수순밟기에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개헌초안은 전쟁포기 조항을 유지하면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군을 보유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작성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제정은 개헌을 위한 첫 단계다. 현행 헌법에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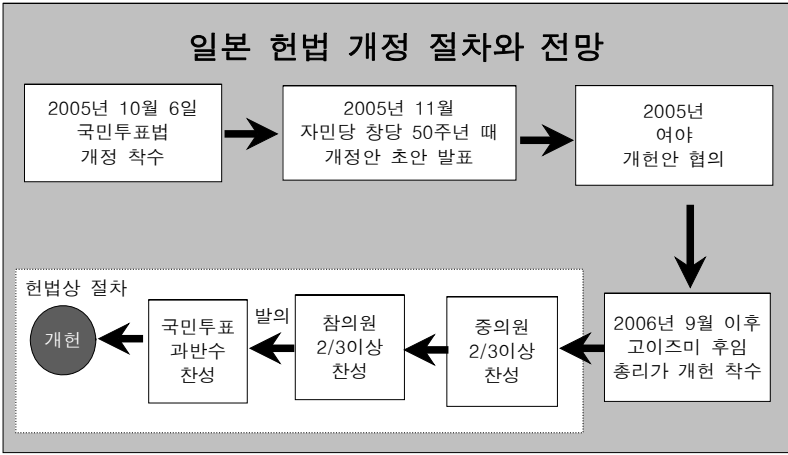
⁶⁰ 연합뉴스, 2003년 9월 14일.

⁶¹ 毎日新聞, 2005년 10월 6일.

의원·참의원 각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지만 국민투표법이 없어 절차상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자민당은 당초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제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논의를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에서 높아졌고, 야당인 민주당의 새 대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도 이에 동조했다. 대표 당선 이전부터 일본의 외교·안보 역할 확대를 주장해 온 마에하라 대표는 개헌에 적극적이다.

자민당은 올해 안에 민주당 의견을 수렴해 국민투표법안을 만들고, 내년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올해 안에 민주당 의견을 수렴해 국민투표법안을 만들고 내년 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오는 10월 창당 50주년을 맞아 개헌안 초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헌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국민투표법의 언론보도규제·투표권자 나이·과반수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민주당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여론은 개헌의 핵심인 헌법 제9조 개정에 아직 부정적이다. 9조는 전쟁 및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은 10월 5일 전국 유권자 4,550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개헌에 대해 58%가 찬성하고 3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9조 개정에 대해선 62%가 반대하고 찬성은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월에 임기를 마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개헌은 내임기 중에는 불가능하며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듭할 일”⁶² 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경화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우경화는 일반적으로 4가지 요소, 과거사(침략사)에 대한 인식, 평화헌법 개정인식, 일본국가 및 민족주의에 대한 편향 그리고 정치·군사대국화 등으로 연계되어진다.

⁶² 중앙일보, 2005년 10월 6일.

오오다케 히데오는 나카소네 등이 주장하는 신보수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 대외적 전통주의(nationalism), 사회적 자유주의로 보았으며, 여기에 나카소네는 정치대국화 의지가 추가 된다고 보았다. 특히 나카소네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민주주의를 접목시키는 대중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국민적 통합을 위해 천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일제 식민정치의 강제성을 교묘하게 희석시키고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1999년 7월 22일 일본 중의원에서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천황찬가)가 국기·국가로 부활했으며, 일본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나카소네의 1985년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는 고이즈미에게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는 2005년 10월 17일 집권 후 다섯 번째로 신사참배를 하였다.

헌법개정과 관련, 고이즈미 정권은 2005년 9월 11일 일본총선에서 압승한 후, 중의원에 헌법조사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10월 6일부터 국민투표법 제정논의에 들어갔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는 북한 핵과 중국의 군사위협을 빌미로 자위대의 군사역할 확대를 시도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경화의 4가지 요소는 미국의 일본점령정책의 보수화 귀결 즉, 전전의 천황제 주권론이 전후 천황제 민주주의로 변질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정치문화적 특성인 萬世一系の 전통적인 천황제는 아직도 일본의 특수성으로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IV

일본의 군사안보전략

일본은 탈냉전과 그에 따른 세계적 규모의 안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오자와 등의 자위대역할 확대론자들은 일본의 자립적인 방위를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안보역할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미·일 안보협력의 중시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미·일 안보협력 과정에서 전문적인 군사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방위청 등 군사역할 확대론자들의 영향력이 제고되고, 일본의 전반적인 우경화현상이 고조되면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증대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의 군사안보 전략을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1995년의 「신방위대강」과 1997년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은 1995년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신방위대강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1997년에 완성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핵심 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지침이 일본 단독 유사(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미·일 협력방안)였다면 새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를 주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및 대만해협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향후 대만사태의 진전은 중·일

관계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토(京都)대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는 “미·일동맹에서의 중국 변수”란 주제발표(동아시아 연구저널)를 통해 일본이 21세기의 새 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그는 “1996년 미·일 신안보선언과 뒤이은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1993년 한반도 위기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급부상하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일본처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균형자·안정자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중 관계는 계속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⁶³

외교·안보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한 부시 행정부로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인 중국을 억제하는데 미·일동맹은 필요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신방위대강의 수립

일본 군사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인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새 방위계획 대강(1995.11.28)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구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①미·일 안보체제의 유지·강화, ②유엔평화유지

⁶³ 동아시아 정치학자들은 동아시아 연구저널(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의 제3집 ‘중국과 동아시아’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2001년 8월 4일에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중앙일보, 2001년 8월 9일.

활동(PKO) 참여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③자위대 규모 축소, ④AWACS(조기경보기) 4대 도입 등 질적인 전력은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8년 구(舊)대강에서는 미·일 안보체제를 “일본에 대한 침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 그 역할을 자국 방위에 국한했었다. 그러나 신대강에서는 “미·일 안보체제가 일본은 물론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보장 환경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개정했다. 이는 미·일 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일본의 자국방위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일 양국은 냉전 종결, 소련의 해체, 미·일경제의 역학관계 변화 등 미·일 안보체제를 둘러싼 냉전환경에 이어서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선 러시아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일본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후의 미·일 안보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일 안보체제는 소연방 해체 이후 최대의 잠재적 라이벌인 일본의 독자적 군사노선 내지는 패권국 추구를 막는 효과적인 틀이라는 점이다.

둘째, 미·일 안보체제의 글로벌화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체제의 목적을 일본 단독방위에서 아·태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축으로 전환하는 ‘뉴비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뉴비전은 옛 소련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미·일 안보체제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면

서 지역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셉 나이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최근 냉전종결 등의 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자간 안보체제에 관한 미국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독자적 노선을 다자간 안보의 틀 속에서 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⁴

셋째, 냉전 후 미국의 중대한 이익인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에 있어 위협세력은 현재 중국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중 연계일 것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군비증강과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의도는 미국과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⁶⁵ 미국으로서는 미·일 안보체제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라이벌인 일본을 활용할 수 있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로 미국이 일본내 기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미·일 안보 재조정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대외 정치·군사 활동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할 것이며, 특히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에 합당한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사고는 첫째, 미·일동맹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미·일 안보체제를

⁶⁴ Joseph Nye,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Vol. 89, Winter 1992-1993, pp. 96~115.

⁶⁵ 남지나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Hisahiro Kanayama, "The Future Impor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June 1994), pp. 5~23.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 해군의 수빅灣 철수와 극동 소련 함대의 감란기지 철수를 계기로 초래된 힘의 공백을 중국 해군이 메우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大洋海軍」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남사군도를 비롯한 대서양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지하되 지역주의와 유엔 중심을 강조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자주성을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대강의 내용 중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다각적 안보’ 개념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PKO를 비롯해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아시아지역포럼(ARF) 등의 회원국가와 다각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이론도입을 앞장서 주장해 왔다.

일본은 아·태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중국·러시아 등 지역국가들과 양국간의 군사교류를 넓혀 상호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아시아 각국으로 연계시키는 지역중심의 다자간 안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역할 확대, 전략의 전개에 따라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역내 국가들로부터 군비증강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을 제고시켜 보다 자주적 입장에서 안보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새 방위계획 대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PKO 참여, 대규모 재해와 테러에 대한 대응 등 일본의 국제적인 군사공헌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냉전구도의 붕괴에 따라 옛 소련의 위협을 삭제한 반면 한반도와 중국을 최대 위협요인으로 규정했다.

일본 방위청은 다양한 사태의 내용으로 “일본에 대량 난민이 도래할 경우, 재외국민의 긴급피난, 부유기뢰(浮遊機雷), 국제연합이 경제제재를 결의한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한

반도 유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자와 등이 주장하는 논의들은 미·일 안보체제 강화라는 틀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11월 28일 확정된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병력과 장비의 대폭 삭감과 장비의 하이테크화와 무기의 합리적 운용 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이 양에서 질 지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방위정책⁶⁶은 자위대 병력을 정원 18만 명에서 16만 명(예비역 1만 5천 명, 상비정원 14만 5천 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육상자위대는 12개 사단에서 8개 사단으로 줄어들었으나 헬기공수여단이 신설되어 전력손실을 보강했다.

전차나 대포 등 전투중심장비는 내구년수가 지난 장비를 새로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10년에 걸쳐 삭감한다. 전차의 경우, 구형인 61식 전차를 중심으로, 현행 1,200대 중 300대 정도를 삭감하였다. 61식 전차는 관동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에 관동지방의 부족분은 북해도로부터 신형전차를 갖고 와서 메우기로 하였다.⁶⁷

아울러 1,500만 명 규모의 ‘즉응 예비자위관’이라는 동원 예비군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태까지도 ‘예비자위관’(4만 6천명, 훈련연 5일)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임무가 기지 경비 등 후방지원업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발하여 전선작전이나 게릴라 행동(가령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의 방지가 가능

⁶⁶ 防衛白書 1996, pp. 73~134.

⁶⁷ 朝日新聞, 1995년 5월 23일; 防衛白書 1996, p. 123.

하도록 하였다. 훈련도 현행의 연 5일에서 21일로 증가시켰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정수를 60척에서 5척으로, 소해정선단을 2개 부대에서 1부대로, P-3C 대잠수함초계기를 100대에서 80대로 각각 감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비인 잠수함은 16척 그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P-3C의 레이더를 강화한다든지 영상 전송 장치를 갖추는 등 잠수함의 추적뿐만 아니라 수상 감시능력도 증대시키기로 하였다.⁶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350대에서 300대로 줄이는 대신 공중 조기경보기(AWACS) 4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1995년 말 운용되고 있는 주력 전투기 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행기는 F-15이다. 이러한 세계 최강의 요격전투기 F-15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그 밖에 사우디아라비아가 30대, 이스라엘이 21대 보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1995년 말 현재 이를 185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최종적으로 210대 도입 예정, 참고로 미국은 820대 보유), 한 편대에 F-15를 24대씩 배치시켜 요격전투기 부대를 7개 편대로 운용하고 있다. F-15는 1980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F-4EJ(F-4의 개량형)는 점차로 퇴역하고 1995년에는 3편대 72대가 운용되고 있다(그 밖에 ‘예비기’로서 F-4가 50대 정도 있다).

이번 신방위대강에서는 F-15로 구성된 7개 편대는 그대로 두고, F-4EJ의 요격부대를 3개 편대에서 2개 편대로 1개 편대를 삭감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F-4EJ 1개 편대의 전투기와 예비기 일부(1개 편대의 전투기 수를 24대에서 22대로 감축)를 합쳐 50대 정도를 퇴역시킴으로써, 요격전투기 보유대수를 350대에서 300대

⁶⁸ 朝日新聞, 1995년 5월 24일.

로 줄이게 되었다(전투기의 총수는 430대에서 400대로 감축).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오래된 기종의 전투기를 약간 줄이는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는 요격전투기 능력이 전투기 숫자만큼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10개 편대 중 1개 편대(新田原 소재)를 삭감한다는 자체는 그런대로 군비축소의 제스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알기 쉽게 단순화시키면 요격전투기 부대의 능력은 100에서 95정도로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F-15의 도입은 이미 달성되기는 하였으나, 1996년부터의 5개년계획에서는 제조능력 유지와 소모분의 보충을 위해 F-15(정확히 말하면 F-15DJ)4대를 새로 도입하고, 1980년 초에 도입했던 초기 F-15의 성능 보충을 위해 개량작업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공중급유기이다. 그 당시 일본의 거의 모든 전투기나 수송기에는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일본 방위청이나 자민당측은 PKO 파견이나 비행훈련시 체공시간 연장을 위하여 공중급유기의 도입(4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회당과 사키가케측은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행동반경을 대폭 연장시키기 때문에 인접국가에 위협이 되는 등 전수방위(오로지 수비만 하는 방위체제)의 원칙을 넘어선다고 이를 적극 반대하였다. 결국 5개년계획에서는 공중급유기의 성능, 운용구상 등 공중급유기에 관해 검토하여 결론을 얻어 대처한다고 일단 이 결정을 유보하였다.

공중급유기는 과거에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일본의 전투기와 전폭기의 행동반경·체공시간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는 관계로 F-15의 전투행동반경이 1,500km(항속거리는 4,600km)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 번이라도 중간급유를 받으면 행동반경

은 3,000km 이상으로 증가되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중국 내륙까지 전투반경을 넓힐 수 있게 되어 일본주변지역에 대한 무력행사를 충분히 가능케 한다.⁶⁹

현재 방위청측이 공중급유기의 후보기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공군이 1990년 초에 도입하기 시작한 C-17기종으로, 이 기종은 원래 장거리 대형수송기이다. 방위청측은 이를 그대로 장거리 수송기로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기의 커다란 동체 안에 급유시설을 장치하여 필요할 때 공중급유기로도 사용하는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생각하였다.⁷⁰

탈냉전시대를 맞아 자위대의 새 모습을 제시한 「신방위대강」에 따르면 재래식 무기를 과감히 축소했으나 첫째, 해군력의 핵심인 잠수함부대의 현행 유지, 둘째, 헬기공수여단 등 기동부대의 증강, 셋째,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첨단장비 보강 등 군사력의 효율화를 통해 전력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본부 신설은 일본판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구축을 넘보는 자위대의 최대 야심작이다. 이는 ‘밖을 지향하는’ 자위대 변신의 신호탄이라고 보여진다. 신대강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전수방위개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고 군사력의 전진배치를 계속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신방위대강」은 선진국의 군비억제 경향, 국내의 정권

⁶⁹ F-15는 중국주력기 SU-27과 견주어지는 우수한 전투기이다. 조선일보, 2001년 8월 23일.

⁷⁰ 참고로 C-17은 75톤(완전군장의 공수부대원이면 약 240명, 보병이라면 약 320명 수용 가능)의 화물을 싣고 4,500km를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일본의 전수방위는 유명무실해졌다.

교체, 그리고 재정사정 등 국내외 요인을 고려하여 외형적인 축소 방향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을 21세기의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전진화 및 해외파병 기동력 강화 및 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구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미·일동맹 강화

국제협조 또는 다각주의적인 안보협력과 미·일 안보협력을 양축으로 제시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미·일 안보협력을 주로 내세운 신대강의 입장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미국의 영향, 구체적으로 나이(J. Nye) 국방차관보가 이끄는 그룹의 역할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한다.⁷¹

1995년 2월 28일에 작성된 나이 보고서의 특징은 첫째, 이후 20년에 걸쳐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방위 능력으로 10만 명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방위능력의 유지와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미·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의 다각적인 안전보장 협력을 위해 대화의 촉진과 적극적인 의의를 정식으로 인정한 점이다. 미·일 안보관계의 재정문제도 워싱턴의 일방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와타나베가 설명하듯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⁷²

⁷¹ 船橋洋一, “日米安保再定義の全解剖,” 世界 (1996.5), pp. 22~53.

⁷² 渡邊沼夫, “日米安全保障關係の新展開,” 國際問題 (1998.3), pp. 24~25.

나이 이니셔티브가 일본 국내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으로는 군사적 현실주의자의 주장대로 자위대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걸프전쟁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은 일본이 얼마나 위기에 약한 시스템인가 통감하였다. 따라서 당초에는 PKO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던 여론도 점차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일본국민은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처럼 군사적 현실주의의 입장은 미·일안보 재정의의 과정에서 점차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6년 4월 하시모토 수상과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미·일 양국 국민에의 메시지: 21세기에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미·일안보가 극동의 범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신안보선언은 실질적인 안보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일 신안보선언 이후 자민당의 국방족⁷³ 및 자위대의 간부들은 신대강이 평화시에서 유사시로 이행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였고,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 신가이드라인을 작성하려고 하였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1996년 9월 19일 제1차 중간보고안,

⁷³ 일본자민당의 정책심의회기구인 정부조사회에는 부회(部會)라고 불리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수당 의원과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이 연합형성되어 왔다. 부회장 혹은 보수당 의원은 관계하는 성청의 예산이나 정책 또는 법안을 그들의 의도대로 유리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족(族)의원이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국방족은 국방예산이나 정책 등을 유리하게 관장하는 국회의원을 말한다. 日本經濟新聞社, 自民党政調會 (東京:日本經濟新聞社, 1983), p. 124.

1997년 6월 8일 제2차 중간보고안, 1997년 9월 23일 최종보고안이 확정되었다. 제1차 중간보고안은 미·일간의 협력사항을 ①평상시 협력, ②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③일본 주변지역 사태에 대한 협력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미·일은 최초로 극동이라는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으로 확장시켰다.

제2차 중간보고안의 특징은 새로운 범위의 일본 주변의 유사시에 대비한 공해 및 상공에서 미국과 자위대의 실효성에 역점을 둔 폭넓은 6개 분야의 40개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었다.⁷⁴ 최종보고안은 1차 보고안에서 합의된 평상시 협력,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일본 주변유사에 대한 6개 분야의 40개 항목을 확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이 첨가되었다.

최종 방위협력지침과 1978년 제정된 방위협력지침⁷⁵을 비교하면 첫째, 평상시 협력은 침략 미연방지인 데 반해 과거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보유하고 미국에게 시설을 제공한다.

미국은 핵억지력을 보유하며 즉각 대응부대를 운용·증원하고 미·일은 침략에 대비하여 작전·정보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것이다. 최종 협력지침은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갖는다. 미국은 핵억지력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에 배

⁷⁴ 防衛協力小委員會, 日本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とりまとめ(東京: 防衛廳, 1997), pp. 1~31.

⁷⁵ 미일은 1970년대 후반 소련의 극동 및 인도양에서 해군을 증강(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침공)하자 이러한 신냉전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위협력을 개시하였으며, 일본의 해상수송로 전략을 추진하였다. 극동유사의 경우 첫째, 미 해군은 위협의 대상인 극동소련의 해공군기지를 공격하고, 둘째,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지원하며 소련함대의 3해협의 통과를 봉쇄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치한 병력을 유지한다. 특히 정보교환과 정책협의를 위해 미·일 안보보장실무협의회(SSO)와 미·일 안전보장실무협의회(SSC)를 각각 설치한다. SSO는 미국 측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서 외무장관과 방위청장관이 참가하며 SSC는 일본측에서 외무성 북미국장과 방위청 방위국장이, 미국 측에서 국무차관보와 국방차관보가 참가한다. 이밖에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국제 구호활동에 협력한다.

둘째, 일본이 무력침략을 당했을 경우, 즉 일본 유사시의 과거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한정적이며 소규모의 침략을 자위대로 격퇴하며, 자력으로 격퇴하기 어려우면 미군의 협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최종 협력지침은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미·일간 조정기능을 신속히 시작한 뒤 합의에 따라 준비된 선택단계에 의거, 준비를 진행한다. 무력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일본은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기에 침략을 격퇴하고 자위대는 일본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방어작전에 돌입한다. 미국은 일본에 적절한 협력을 제공하는 한편 자위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조치를 취한다.

셋째,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 협력에 있어서 과거 협력지침은 극동지역에서 안전이 저해될 경우 미군의 병참지원에 대해 연구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 협력사항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지침은 난민구호·이송, 피난민에 대한 응급 물자지원 등 인도적 조치와 일본주변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난활동, 기뢰제거·선박검사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비협력에 있어서 미·일은 공동작전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력기준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메커니즘을 설치한다. 또한 유사시 백악관과

일본 총리공관을 잇는 핫라인이 연결되고 양국 수뇌부는 정보교환을 통해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신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확대,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일정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둘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처는 물론, 셋째, 미국과의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참여 명분을 주었다는 데 있다.

새 지침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유사개념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지침이 일본 단독 유사(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미·일 협력방안)였다면 새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를 주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물론 양측은 최종합의서에 일본 주변유사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6월 중간보고 발표 이후 ‘일본주변유사’에 대만해협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 방위관계자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을 주변유사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다.

일본 주변유사시에 대비한 인도주의 활동, 일본 주변지역 탐색·구조 등을 골자로 한 방위지침 최종안 6개 분야 40개 항목 중에서 특히 피난민 구조·이송, 주한일본인 철수, 기뢰 소해, 경제 봉쇄 등에 따른 임검활동 등은 일본 함정과 군용기가 한국 영해·영공에 들어오는 근거가 되어 필연적으로 주권침해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8월에 일본방위청은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개발을 위한 미·일 공동기술연구를 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TMD가 해외미군을 방어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미국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명칭대신 중립적인 탄도미사일방어(BMD)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국가미사일방어(NMD), TMD 계획을 유일하게 지지하고 있다.

<표 IV-1> 일본 주변 유사시 미·일협력 주요 항목⁷⁶

분 야	구 체 항 목
인도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지로 인원 및 보급품 수송 · 재해지로 의료, 통신 및 수송 · 피난민 구조 및 이송, 응급물자지급
수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수색, 구조, 정보교환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경제제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임검) 및 관련활동 · 정보교환
비전투원 피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환 · 자위대 시설 및 민간항만 공항의 사용 · 일본인 입국시 통관, 출입국 관리 및 검역
미국활동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 등을 위한 자위대 시설 및 민간항만, 공항의 사용 · 자위대 시설 등에서의 인원 및 물자의 하역장소 및 보관시설 확보 · 자위대 시설 및 민간 항만, 공항의 운용시간 연장 · 미항공기의 자위대 비행장 사용, 훈련장 제공 · 자위대 시설 등에서의 물재(무기 탄약 제외) 및 연료, 유지, 윤활유 제공 · 공해상의 미함정에 대한 해상수송, 미 함정, 항공, 차량의 수리 정비 · 일본에 후송된 부상자의 치료·이송, 의약품 및 위생기구 제공 · 미군시설구역 주변해역의 경계 감시 · 미·일 관계기관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 및 기자재 제공 · 미 함정의 입출항 지원
자위대와 미군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환에 의한 경계감시체제의 정비 · 공해상의 기뢰 제거

⁷⁶ 朝日新聞, 1997년 9월 24일.

3. 주변사태법

1998년 4월 28일 각의에서 신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주변사태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법안은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주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압행동에 나서는 미군에의 지원내용과 실시과정을 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평화적 진보주의자(신민당)는 “헌법문제 등에서 의문점이 많고, 여당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주의자(자민당)는 “국내정치보다는 외교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민당의 저항을 무시하고 각의 결정을 추진하였다.⁷⁷

주변사태법안의 비판은 주변사태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지역의 이미지를 없애면서 미군에 협력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투명한 후방지원에 대한 비판이다. 자위대의 수송협력의 장소가 되는 후방지역의 정의에 대해서도 “일본영역 또는 전투행위가 행해지지 않고, 또한 활동기간 동안 전투행위가 행해질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후방지원의 개념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시 취할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성립(1998.5)시켰으며, 미국과 협력범위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2001년 4월에 출범한 고이즈미 정부의 대외노선도 ‘21세기의 정치대국화’ 대외정책 노선과 이를 위한 ‘지도력 분담’(power-sharing)

⁷⁷ 朝日新聞, 1998년 4월 28일.

을 지향한 미·일동맹 강화의 틀 내에서 추구될 것이므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 틀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한 상호주의(대북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시 정부는 일본의 헌법 9조,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하면 서라도 미사일방어(MD)계획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바람직하며 군사비 부담이 늘더라도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변화하였다. 일본 정부·자민당이 당초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2년 앞당겨 작성하기로 한 데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⁷⁸ 일본은 자위대의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키나와 등 남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17% 늘리는 등 군비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백서(2001)는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중국위협론과 맞물린 것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방위계획에는 일본이 미국과 공동연구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계획이 구체화될 것에 대비하여 육·해·공군 자위대에 중복되어 있는 지휘명령체계를 통합하고 조직·장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 되어 있다.

⁷⁸ 日本經濟新聞, 2001년 8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활발해졌으며, 2003년 6월 6일에는 전쟁 상황에 대비한 유사법제를 마련하였다.⁷⁹

단기적으로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근거를 마련한 일본 정부가 자위대 병력을 동원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나서고 있다.⁸⁰ 일본 연립여당이 자위대의 PKF 업무 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12.8)시켰으며, 2002년 초에 동티모르에 파견될 60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시설대의 무기사용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군에 대한 연료와 식품의 보급, 소송활동과 파키스탄의 난민을 위한 구호물자 수송을 위하여 약 1,500명을 파병하기로 하였으며 이시스함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은 약 100억~200억 엔을 책정하였다.⁸¹

일본 지원부대의 활동범위는 아라비아해와 미군 거점인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 인도양, 태평양, 페르시아만, 동남아시아, 호주 등으로 대서양을 제외한 전 해상을 활동범위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이러한 PKO활동과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사법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일본은 전쟁에 대한 유사 7개 법안을 국회(참의원)에서 2004년 6월 14일 통과시켰다. 2003년 6월 6일 통과된 유사 3개 법안에 이

⁷⁹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일컫는다. 일본에서 유사법제의 의미는 자위대가 갖고 있는 군사력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⁸⁰ 毎日新聞, 2001년 11월 31일.

⁸¹ 朝日新聞, 2001년 11월 16일.

어 2004년 6월 14일 7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시를 대비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⁸²

일본신문들은 한결같이 이 법제로 일본의 안보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고 분석하였다. 물론 유사법제는 전수(專守)방위의 틀을 깨는 것은 아니다. 외부의 주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쟁포기 족쇄라는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것이다. 이 법제는 보수세력의 화두였던 ‘보통 국가 일본’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법제란 2002년 4월 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일컫는다. 무력공격사태 대처 법안은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개념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일본에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등에는 정부의 각의에서 대처 기본방침을 결정, 총리를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책을 강구한다. 총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가 원활히 활동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의무를 새로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방위출동 발령 후 자위대에 의한 사유지 강제수용이나 가옥철거 등을 가능하게 한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은 자위대, 방위청, 경찰청, 외무성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해 기능을 강

⁸² 유사 7개 법안은 전시에 미군이 원활히 활동하기 위한 미군 지원조치 법안, 자위대와 미군이 공항과 항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미국과 일본이 물품과 역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 개정법안 등이다. 朝日新聞, 2004년 6월 15일.

화하는 내용이다. 안전보장회의에 조언하는 ‘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일본의 경우 이런 내용들은 헌법에서 무력의 보유·행사를 포기하고 미국에 안보를 일임해 왔기 때문에 ‘법의 공백 상태’로 남아 있던 부분이다.

이 법제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전후 50년간 ‘유사’ 라는 것은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였다”며 “이 문제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를 본 것은 일본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사법제는 1963년부터 방위청 일각에서 소련의 일본 상륙을 상정하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군국주의 시대의 ‘전시 총동원 체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적 혐오감과 좌파야당의 반발이 강해 서랍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노동미사일 실험 발사, 1998년 대포동미사일 실험 발사, 2001년 9·11 테러에 이은 북한공작선 격침 사건, 2002년 10월 이후 북한 핵 위기, 중국의 군사위협, 이라크전 등으로 국민의 안보위기감이 고조됐다. 이 사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제정, 자위대의 주일미군 후방 지원을 강화한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미·일 합의 등 자위대의 미군협력과 해외활동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미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측은 유사법제 정비 다음 단계로 일본의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미·일 물품·용역 상호 제공 협정(ACSA)의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협력을 통해 일본 안보가 강화되면 될수록 동맹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과의 거리는 점점 커져 결국 개헌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伸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고 현지 사령관에 육군대장을 보임할 계획이라고 한다.⁸³ 이는 한반도와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비, 주일미군기지를 아시아의 핵심 기지로 격상시키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 전체의 유사사태에 대응하는 임무를 가진 미1군단이 일본으로 이전되고, 그 동안 소장 직급이 맡아온 주일 육군사령관에 이례적으로 대장이 보임된다면, 주일미군기지의 성격을 일본 방위는 물론 동북아의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수준에서 중동 지역까지를 시야에 둔 ‘중심(hub)기지’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 육군 1군단이 일본으로 이전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쳐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일미군 사령부에 해체·흡수되고,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산케이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1만 4000명의 해병대 병력 중 일부를 홋카이도에 있는 육상 자위대 훈련장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⁸⁴

미국은 이와 함께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도쿄의 요코다(横田)기지에 일본의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와 제2수송항공대를 이전해 달라는 제안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안은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 세계 미군 재편의 일환이며, 주일미군

⁸³ 産經新聞, 2004년 4월 21일; 日本新聞, 2004년 4월 8일.

⁸⁴ 朝日新聞, 2004년 6월 7일.

과 자위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비감축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훗카이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 구상에 따르면 훗카이도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장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병력은 오키나와 미 3해병사단 중포병부대로, 600~7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최북단 훗카이도에는 그 동안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측이 주일 미군재조정과는 별개로 일본 측에 항공자위대 총사령부를 주일 미군 요코다기지 안으로 옮겨달라는 이례적인 부탁을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양국 공군 사령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항공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간에는 요코스카·사세보(佐世保)기지 공유 등의 연계가 이뤄져 왔으나 이번 구상을 통해 미·일 해·공군의 일체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은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작전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주요 군사 거점이 될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군사허브(hub)’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남방방위

일본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옛 소련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방방위’에서 중국을 겨냥한 ‘남방방위’로 바뀌었다. 일본방위청은 자위대 주력군을 북방에서 규슈·오키나와 등 남방지역으로 이동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방위전략을 2003년까지 세우기로 했다.⁸⁵

신 방위계획의 골자는 주 방위지역을 북방에서 남방으로 바꾸고, 자위대의 기동력과 통솔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자민당 검토안에는 규슈·오키나와 부대의 증강 항공기와 선박 등 수송능력 대폭강화 장비를 전차에서 장갑차 등 기동성이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극동 러시아군 지상병력이 냉전 말기의 4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국방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대상은 북한이다.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괴선박 영해침범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자위대와 일본방위청은 이미 북한을 선제 기동타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2000년에는 해상자위대가 북한의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호위함에 탑재하는 초계 헬리콥터 부대를 동해쪽의 마이즈루기지 주변에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북방 대신 서남쪽을 중시하겠다는 자위대 재배치 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 자위대 주력 중 하나였던 홋카이도의 제5, 제11사단을 여단급으로 격하하는 반면, 오키나와의 제1혼성단(2,000명 규모)과 시코쿠의 제2혼성단을 여단으로 격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02년에 건조된 2척의 전역기능을 탑재한 최신형 이지스(AEGIS)함을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이즈루기지와 사세보기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⁸⁵ 日本經濟新聞, 2001년 8월 6일.

이 같은 자위대의 재배치는 단기적인 주변 위협증가 외에 일본이 갖는 불안감 때문에 일본의 안보 전문가 20명은 정부 위탁으로 1년간 연구 끝에 2001년 5월 「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2020년을 예상해 만든 보고서이다.⁸⁶

이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통일 후에는 해병대와 공군 중심의 기동부대로의 군재편이 예상된다. 이 경우 미·일 안보동맹의 재검토가 필요해진다”고 평가,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보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국가간 경쟁의식이 강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내셔널리즘이 대두할 우려가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나라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19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독일과 같은 존재’라고 규정했다. 즉,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를 위험한 국가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공동연구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계획이 구체화될 것에 대비, 육·해·공군 자위대에 중복되어 있는 지휘명령체계를 통합하고 조직·장비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5. 군사력 강화

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방위력 정비에 대하여는 1996년

⁸⁶ 日本經濟新聞, 2001년 8월 6일.

이후에 관한 신방위대강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삼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⁸⁷(1996~2000)을 수행하였다.

이 계획의 방침에 의하면 기간부대와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신방위대강에서 정한 새로운 방위력 수준으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화·효율화·컴팩트화를 추진하였다.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의 방공요격능력 부분에서는 장래의 기술적 동향에 대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요격전투기(F-15)를 앞으로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화를 위한 시개수(試改修)를 행하였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초계 헬리콥터(SH-60J)를 도입하며, 장래의 기술적 수준의 동향에 대응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날개 초계기(P-3C)를 앞으로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능력향상을 위한 개수를 하였다. 또한 고정날개 초계기(P-3C)의 후속 기종에 관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함정에 대해서는 호위함, 잠수함, 소해정, 미사일정 등을 건조하였다. 호위함의 건조에 대해서는 호위함 부대 전반의 효율적인 형태에 유의하면서 갱신·근대화를 추진하였다. 해상과 해안에서의 격파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원전투기(F-1)의 후속기종으로서 새로운 지원전투기(F-2)를 도입하며 계속해서 지대함 미사일(SSM-1)을 도입하였다.

수송력 및 기동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송 헬리콥터(CH-47), 수송함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 초계기(C-1)의 후속 기종에

⁸⁷ 防衛白書 1996, pp. 135~165.

관하여 검토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공중급유기의 성능, 운용구상 등 공중급유기능에 관해 검토해서 결론을 얻어 대처하였다.

이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방위관계비 총액의 한도는 1995년 가격으로 대략 25조 1,500억 엔으로 하는 것을 1995년 12월 15일 각료회의에서 확정했다.⁸⁸ 일본 정부는 1996년부터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방위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연평균 실질방위비 증가율은 2.1%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별도로 이 기간 중 1,100억 엔을 긴급재난대책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해 사실상 방위비 증가율은 2.2%에 이르렀다.

이 계획은 3년 후(1997)에 그 시점에서 국제정세, 경제재정사정 등의 내외정세를 감안하여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⁸⁸ 총예산 중 무기 구입비는 4조 2800억 엔이다.

<표 IV-2> 신방위대강: 자위대의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부 대 별	내 용
육상 자위대	육상자위대정원		편성정수 16만명(예비역 1만 5천명 포함) 상비정원 14만 5천명
		평시의 지역배치부대	8개 사단 6개 연단
	기간부대	기동운용부대	1개 기갑사단 1개 특과단 1개 공정단 1개 教導團 1개 헬기단
		지대공미사일부대	8개 高射特科團
	주요장비	전차 특과화력	약 900대 약 900문
해상 자위대	기간부대	對潛·수상함정부대 (기동운영)	4개 호위대군
		對潛·수상함정부대 (지방隊)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육상 對潛機部隊	7개대 6개대 1개 소해대군 13개대
	주요장비	대잠수상함정 잠수함 작전용항공기	약 50척 약 16척 약 170대
항공 자위대	기간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요격전투기부대 지원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항공수송부대 경계비행부대 지대공미사일부대	8개경계군/20개 경계대 9개 비행대 3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항공경계관제부대에 편입 6개 高射群
		주요장비	작전용항공기 (그중 전투기)

하시모토 총리는 취임 이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재정개혁 등을 6대 개혁 과제로 선정하면서 1997년을 재정재건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GNP대비 3% 이하로 축소(1997년 4.7%)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 방위력 증강계획(1995~2000)을 수정(1997.12), 투입예산 중 9,200억 엔을 삭감하고 전차(96 → 60대), 장갑차(168 → 157대), 호위함(8 → 7척), F-2 전투기(47 → 45대) 등의 조달 규모를 축소·조정하였다.⁸⁹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197억 엔 적은 2,538억 엔을 편성, 최초로 감축(전년비 7.3%)되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신뢰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예산을 대폭증액(1997년 2억 1,000만 달러 → 1998년 2조 9,000억 달러), ‘아·태안보세미나’ 등 다각적인 국방교류를 추진하였다.

전력의 재배치와 관련, 유상 자위대는 정원(17만 6,245명)을 5,141명 감축하고 중부 방면대 13사단(7,100명)을 여단(4,100명 규모)으로 재편하였으며, 즉응 예비자위관 2,006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동북 방면대 6사단 神町市 보병연대 등에 배치하였다. 방위청은 장비 고도화 등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비·보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에 ‘보급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항공보급처’, ‘함선보급처’를 신설하였다.

1998년도 일본의 방위예산(4.8, 참의원 통과)은 전년에 비해 0.25% 축소된 4조 9,290억 엔(약 400억 달러)으로 기지유지·시설정비와 전투장비 구입분야가 감축되었으나 부대재편을 통한 경량화·기동화와 함께 첨단무기 계속 도입 등 전력증강의 기초

⁸⁹ 防衛白書 1998, pp. 120~133.

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8년도 방위예산의 특징은 240조 엔에 이르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성역 없이 세출을 삭감한다는 하시모토 정권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고 국제적인 군축 분위기에 부응하면서도 주요 첨단 무기 도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 ‘전력의 질적 향상’을 지속 추구함으로써 방위능력 제고와 함께 주변유사사태에 대한 개입여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6월 23일 발표한 1998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동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입각한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질적으로는 군사력을 줄이고 있으나 양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술 운용능력 향상 및 군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⁹⁰

나.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2000년에 확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년)은 25조 1,600억 엔 규모이며, 5년 이내에 준항공모함급 호위함과 공중급유기 등의 공격형 장비를 도입, 방위력을 증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⁹¹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준항공급 초계용 헬기 탑재호위함 2척(배수량 3,500t, 1,900억 엔)과 공중급유기 4대(900억 엔)의 도입이 명기됐다.

⁹⁰ 防衛白書 1998, pp. 46~50, 61~71.

⁹¹ 防衛白書 2001, pp. 89~102.

이와 함께 최신예 미사일 호위함인 이지스함 2척의 추가 도입(2,800억 엔), P3C 대잠함 초계기 및 C1 수송기의 후계기 개발(3,400억 엔), 정보기술(IT)혁명에 대비한 소형 경량전차 개발(500억 엔), 전투기 F5의 현대화(250억 엔)등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의혹이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백서 2001』은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 간에 이해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공군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해양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육군은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대만에 대한 직접 침공능력은 한정적이며 해·공군은 질적인 면에서 대만이 우위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군현대화목표가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⁹²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2000년 방위백서보다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 방위백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기술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도 된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구와 고이즈미 총리의 자위권의 연구·검토 지시와 맞물린 결과였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긴축예산을 짜면서도 방위비는 삭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2002년의 긴축예산을 위해 분야별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면서 공공사업·개발원조(ODA) 등을 10% 삭감하기로 했으나 방위비에 대해서는 삭감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2001년 일본의

⁹² 防衛白書 2001, p. 60.

방위비는 4조 9,218억엔이며 방위청이 당초 계획한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보다 0.3% 늘어난 4조 9,388억 엔이다.⁹³

『방위백서 2002』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정체되어 있던 남북대화 재개(2002.4)에 합의했지만 군사적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신뢰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방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예산 총액을 명시하지 않아서 불투명하다면서 경계심을 나타내었다.⁹⁴

『방위백서 2003』은 일본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피침을 상정한 기존의 안보전략과 자위대 장비, 편성의 수정방침을 최초로 공식 천명하였다⁹⁵. 또한 방위청과 자위대과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대량파괴무기,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MD 구축과 자위대의 통합안보역량강화 및 국제공헌확대 의지 등을 강조하였다. 2003년도 방위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4조 9,265억 엔을 책정하였다.⁹⁶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개발 및 수출 등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위협요인임을 지적하였으며, 주한미군 전차가 훈련 중 일으킨 여중생 사망사고(2002.6) 등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⁹⁷

일본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중거리 탄도탄 ‘노동’을 요격하기 위

⁹³ 일본방위비가 국내총생산(GNP)에 차지하는 비중은 1% 조금 상회한다. 방위청은 인건비, 식량비 등 고정경비가 방위예산의 45%에 달한다고 하였다. 朝日新聞, 2001년 8월 8일.

⁹⁴ 防衛白書 2002, p. 60.

⁹⁵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방위계획의 大綱’을 작성하여 새로운 방위력 정비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安全保障と防衛力に關する懇談會, 安全保障と防衛力に關する懇談會 報告書, 2004년 10月. pp. 29~30.

⁹⁶ 防衛白書 2003, p. 104.

⁹⁷ *Ibid.*, p. 53.

하여 2005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해상배치(이지스함탑재 SM-3), 지상배치(지대공유도탄 PAC-3) MD를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2004년 예산에 1,000억 엔 반영을 최종 결정하였다.⁹⁸

2004년 7월 7일 홍콩의 명보(明報)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핵심으로 양보다 질 위주로 해·공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첨단 군사기술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므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는 또 “중국의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11.6% 늘어난 254억 달러”라고 밝혔다.

『방위백서 2005』는 중국의 국방비가 작년보다 12.6% 증가했으며, 당초예산에 비해서 17년 연속 10%이상 증액되었고,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패권주의 혹은 단독(單獨)주의의 대두로도 보여지듯이 전략주도권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계하였다.⁹⁹

일본정부·자민당이 당초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2년 앞당겨 작성하기로 한 데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대만해협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방위계획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견제전략이나 일본 우익세력의 북한·중국 위협론과 맞물린 것이다.

⁹⁸ 朝日新聞, 2003년 12월 19일.

⁹⁹ 防衛白書 2005, pp. 54~55.

<표 IV-3>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6):
주요 장비의 정비 규모

구분	종 류	정 비 규 모
육상 자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 · 화포(박격포 제외) · 다연발로켓 시스템 · 장갑차 · 대전차 헬리콥터 · 수송 헬리콥터(CH-47JA) · 지대공미사일(호크) 개선 정비 · 신중거리지대공 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량 47량 18량 129량 10량 7기 0.25개군 1.25개군
해상 자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위함 · 잠수함 · 기타 · 자위함 건조계 · 초계 헬리콥터 (SH-60 및 SH-60J 개선) · 신소해 · 수송헬리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척 5척 15척 25척 39기 2기
항공 자위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격전투기(F-15) 근대화 개선 · 지원전투기(F-2) · 수송헬리콥터(CH-47J) · 공중에 있어서 항공기에 대한 유기능 및 국제협력 활동에도 이용할 수 있는 수송기능의 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기 47기 12기 4기

V

결론: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근대 일본의 천황제국가는 종교 공동체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명치천황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천황은 일본인들에게 심정적 중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특수성은 萬世一系の 천황이라는 점과 결합하여 일본중심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전후 미국의 일본점령정책은 한마디로 비군사화와 민주화정책이었으나,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의 발발 등 미·소 냉전구조의 심화로 인하여 정치·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보수국가로 정착되게 되었다. 따라서 전전의 천황제 주권론도 소위 ‘천황제 민주주의’로 표출되었다.

보수우경화가 일본사회 내에서 주요사조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1982년 성립된 나카소네 정권이후였다. 나카소네 총리는 사상의 근간으로 ‘대중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적 결집을 위해 천황제의 강화와 정치대국화로 주장하였다. 나카소네는 1985년 8월 15일 역대수상으로는 최초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여 주변국들로부터 물의를 빚었다.

냉전종식 이후 199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의 보수우경화 추세는 국제 및 국내정치 변동, 경제침체 및 금융위기 등으로 일본인의 불안심리와 맞물리고, 보수우익세력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는 자유주의사관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인이 잊어온 국가의식과 역사적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보수이데올로기다.

2001년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헌법개정,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 미·일동맹 강화를 주장하며 우경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은 북핵위기 및 노동미사일 발사(1993) 그리고 대포동 미

사일 발사(1998)를 계기로한 북한위협론, 그리고 중국위협론을 빌미로 신방위대강, 미·일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 그리고 유사법제를 마련하였다.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연계된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일본의 유사법제가 자위대뿐 아니라 주일미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일동맹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기동성을 높이는 재배치 작업과 맞물린 유사법제 통과를 보는 중국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동북아에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미사일방어(MD)망을 공동 연구·개발 중이고, 자위대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4대인 이지스함도 4대를 더 들 여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4년 연속 국방비를 10%대로 늘렸고,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제 수호이-27 전투기의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고, 순항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을 만한 정치·외교적 지렛대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은 현안인 북한 핵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일본의 우경화에 빌미를 주지 않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인 군사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대만의 군비 확충을 부르고 있다. 신형 프리깃함 도입과 전투기(경국호)의 독자 개발, 신형 지대공미사일 배치는 좋은 예다. 남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한국도 이지스함 등을 들여올 계획이다.

북한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크게 긴장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북핵문제로 인한 국민의 위기감과 미국이 대북압박의 지렛대로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일본의 재무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재무장할 경우, 가장 위협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할 가상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내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등 일본 주변에서 전쟁에 돌입할 경우 자위대를 동원해 미국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북한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군국주의 부활’, ‘재침 책동 노골화’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러시아의 일본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사법제 통과를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와 직접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일본의 유사법제법안은 공격보다 방어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일본이 과거와 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급변한 국제질서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 자국 내의 정치·경제적 여건상 일본은 유사법제에 이어 평화헌법 개정이후 자위대의 군대변신 수순을 밟을 것으로 한국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심각한 군비증강은 아·태지역국가들의 안보위험을 자극하여 본격적인 군비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아시아는 세계최대의 무기 구매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보통국가 일본의 등장으로 동북아에서 중·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어 역내질서의 심각한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막기 힘든 대세임을 인정하되 일본이 보통국가를 넘어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의 세계 패권지위가 유지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안정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또한 일본의 군사역할을 관리할 것이므로 한국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하여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미 동맹이 이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군사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을 주축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한 중·일간 긴장을 해소한다는 구상도 하여야 한다. 안보대화는 역내 정치·안보적 신뢰 구축과 유사 가능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외교노력이며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공존에 기여하므로 한국은 역내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반도 화해·협력 시대를 맞아 한·일 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과거사 문제로 반일감정이 고조될 경우 한·일 관계가 급냉각하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거사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고, 문화·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의 시민단체와 학계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정부가 책임있

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일본의 아시아침략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중국·베트남·대만·필리핀과의 연대가 가능하며, 또한 중국의 난징(南京)대학살 등이 다루어진 도쿄재판을 일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동 재판과 관련된 미국·영국·러시아 등 당시 연합국과의 연대도 상정할 수 있다.

남·북한도 공동 학술회의와 역사학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하는 등 일본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국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독일·폴란드와 같은 경험적 사례를 참조할 필요도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길정우·김영춘·여인곤·전동진·최춘흠.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와 동북아 질서: 1990년대 동북아질서 예측(Ⅱ).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김영춘.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통일정세분석 2005-07.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우영 譯. Andrew Gorden. 현대일본의 역사: 도쿠가와 시대에서 2001년까지. 서울: 이산, 2005.
- 김호섭·이연우·한상일·이원덕. 일본의 우익연구. 서울: 중심, 2000.
- 李甲允외 9인. 현대 일본의 정치.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6.
- 현대일본연구회. 國權論과 民權論. 서울: 한길사, 1981.
- 현대일본연구회편. 일본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7.
- _____. 日本政治論. 서울: 박영사, 1981.
- 淺井基文. 新保守主義. 東京: 柏書房, 1993.
- 安部博純. 日本ファツズム論. 東京: 影書房, 1996.
- 安全保障と防衛力に 關する懇談會. 安全保障と防衛力に 關する懇談會報告書 (2004年 10月).
- 石田 雄. 明治政治思想研究. 東京: 未來社, 1954.
-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 信夫清三郎. 戰後日本政治史 I. 東京: 勁草書房, 1974.
- 中曾根康弘. 大地有情. 東京: 文藝春秋社, 1996.
- 中曾根康弘·佐藤誠三郎·村上泰亮·西部邁. 冷戰以後. 東京: 文藝春秋社, 1992.
- 日本經濟新聞社. 自民堂政調會.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3.
-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 1991.
- 長谷川慶太郎. 21世紀の世界をさぐる: マルクス主義を越えて. 東京: 學習研究社, 1992.
- 防衛協力小委員會. 日本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

- とりまとめ. 東京: 防衛廳, 1997.
- 藤岡信勝. 近現代史 教育の改革-善玉・悪玉史觀を超えて. 明治圖書, 1996.
- 俵義文. ドキュメント‘慰安婦’問題と教科書攻撃. 高文研, 1997.
- 主谷一彦 譯. Ernst Troeltsch. トレルチ著作集四, キリスト教と社會思想. 東京: ヨルタソ社, 1981.
-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W.W. Norton, 1999.
- Wayne Wilcox, Leo Rose, and Gavin Boyd. *Asia and International System*. Cambridge, Mass.: Winthrop, 1972.

2. 논문

- 김준섭.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2000년 가을).
- 大嶽秀夫. “中曾根政治のイデオロキーとその國內政治的背景.” 同人誌レウアイアサツ特輯: 新保守主義の擡頭 (1987年 第1號).
- 栗屋憲太郎. “東京裁判にみる戦前後處理.” 栗屋憲太郎編. 戦争責任・戦後責任. 東京: 朝日新聞社, 1994.
- 中村繁. “日本の使命としての大東亞戦争.” 勝田吉太郎編. 日本は侵略國家ではない. 東京: 善本社, 1993.
- 上野輝將. “‘軍慰安婦’論争とナショナリズム.” 歴史評論 (1998. 4)
- 船橋洋一. “日米安保再定義の全解部.” 世界 (1996. 5)
- 山室信一. “日本外交とアジア主義の交錯.” 日本政治學會年報 (1998)
- 渡邊沼夫. “日米安全保障關係の新展開.” 國際問題 (1998. 3)
- Hisahiro Kanayama. “The Future Impor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June 1994).
- Ian Storey and You Ji. “China’s Aircraft Carrier Ambitions.” *Noval War College Review*. Vol. LVII, No.1 (Winter 2004).
- Joseph Nye. “Coping with Japan.” *Foreign Policy*. Vol. 89 (Winter 1992-1993).

3. 기타자료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朝日新聞

産經新聞

日本經濟新聞

日本新聞

毎日新聞

防衛白書

『讀賣新聞』

Financial Times Magazine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F/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례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